

광주시, 12개국 ‘외국인주민협의회’

외국인주민 현장목소리 정책 반영…지원사업 등 소개



광주시는 지난 26일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12개국 출신 외국인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주민협의회’를 열고 외국인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외국인주민협의회는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국가별 커뮤니티 대표 등 12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산업단지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광역형비자 사법

사업 공모선정 등 외국인주민 지원사업과 함께 지난 2월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문을 연 외국인 전용 금융센터를 소개했다.

또 5월 24일 열리는 ‘제18회 세계인의날 기념행사’ 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외국인주민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동안 외국인주민협의회에서는 외국인주민 의견을 수렴해 ‘의료동번역 활동가 양성 지원’, ‘외국인주민 전화병원 지정’ 등 사업이 추진됐고, 외국어 생활정보책자에 ‘광주생활가이드’ 번역 언어를 추가했다.

/김도기 기자

광산구, 어르신 건강 돌봄 체감도 높인다

방문·AI 건강관리등 통합 ‘똑똑한 안녕 챙김’ 추진

광산구가 지역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상 속 건강 생활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건강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통합한 ‘똑똑한 어르신 안녕 챙김’ 사업을 추진한다.

65세 이상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광산구 65세 이상 인구 1인 가구는 1만3833가구로, 전체 노인 인구(4만6154명)의 29.9%를 차지하고 있다.(2024년 7월말 기준, 출처: 행정e음)

광산구는 ‘똑똑한 어르신 안녕 챙김’ 사업을 통해 개별로 추진해 온 건강 살핌,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어르신 복지 욕구, 생활 여건에 맞춰 온오프라인 상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돌봄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방문간호 대상자인 홀몸 어르신

268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방문 또는 유선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교육, 우울 검사 등을 제공해 신체·정서 건강관리를 돕는다.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한다.

앞서 이 사업에 참여할 어르신 420명을 모집해 이달 초 사전 건강 측정을 한 가운데, 손목활동량계, 블루투스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 등 스마트기기, 앱을 활용해 보건소 전문 인력이 6개월간 비대면으로 건강 상태를 살피고, 맞춤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폭염, 한파, 감염병 유행, 재해, 명절 등 상황 땀 상시 건강 점검을 강화하고, 동 간호직 공무원과 연계해 지원이 필요한 신규 대상자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이동기 기자

서구, 직장인 ‘찾아가는 심리지원’ 운영

마음 건강검진·상담·강좌 등 회복 프로그램 지원

서구가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해 ‘마음톡톡(talk talk) 서구 직장인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업무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등으로 마음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구가 직장 또는 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진행된다.

서구는 현장에서 ▲스트레스·우울검사 및 뇌파·맥파 측정 등 정신건강검사 ▲고위험군 대상 ‘마음건강주치의’ 상담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의 정신건강 강좌 ▲원예·아로마 프로그램 등 직장인들의 마음 회복을 지원한다. 또

▲당뇨·협압 측정 ▲니코틴 의존도 검사 및 금연상담 등 신체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관내 소재 30인 이상 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신청을 원하는 직장이나 기관은 5월 16일까지 서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ariv2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선휘 기자

전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협력 강화

5월까지 방제 완료 후 지역 책임 정밀예찰

전남도는 산림청, 광주시, 도내 시군, 한국임업진흥원,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계기관 협의회를 25일 산림연구원 산림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회의는 광주·전남지역 기관별 방제작업 추진사항 공유, 헬기·드론·지상 3중 정밀예찰 강화, 광역간 공동방제 협력, 예찰요령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기관별로 전남도는 9만 그루, 광주시는 2만 그루에 대해 피해고사목 제거, 수종전환 등의 방법으로 5

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5일 현재 70%를 완료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여수, 순천, 장성은 반박·집단발생지에 대해 피해목을 모두 베고 기후변화에 적합한 산림으로 바뀌주는 수종전환 60ha를 완료했다.

재선충병 피해확산 저지를 위해서는 5월까지 방제작업 완료 후 꼼꼼한 예찰 활동이 중요한 만큼 시·도와 시군 경계 지역, 국립공원지역 등 예찰구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밀 예찰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조순의 기자

광주전남 기관 사칭 노쇼·피싱, 4달 새 60건 육박

광주 47·전남 9건…소방관·군인·교도관 등 사칭

대량 주문 후 신뢰 형성·대리 구매 요구 뒤 잠적

광주·전남지역에서 기관을 사칭하고 자영업자들을 속여 금품을 빼앗는 전화금융사기 신고 건수가 4개월 사이 60건에 다다랐다.

경찰은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수사에 나서고 있다.

27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24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집계된 기관 사칭 피싱·노쇼 의심·피해 신고 건수는 총 56건(광주 47건·전남 9건)이다.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벌어진 범행은 사기범이 특정 기관 소속 위조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식사 등을 대량 주문해 신뢰를 쌓은 뒤 기관에서 쓰

일법한 물품을 대리구매 해달라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대리구매한 물품을 특정 유통업체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며 수십만원 상당의 배송료를 별도로 요구, 물품을 받게 되면 배송료 돌려주겠다고 속이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1월 1건을 시작으로 2월 4건으로 늘었다가 3월 2건으로 감소한 뒤 4월에는 집계일 기준 무려 40건으로 폭증했다.

지난 23일에는 광주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관을 사칭한 한 사기범이 지역 장어 전문 식당에 식사를 주문했으나 식당 주인이 소방관서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피해를 예방했다.

군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범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소재 식당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식당에 음식을 대량 예약 주문한 뒤 특정 유통업체를 통해 받겠다고 하면서 배송료를 건넨 자영업자들 사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교도관을 사칭하고 천막 업체에 천막을 주문한 사기범도 같은 수법을 썼다가 들뜬 나 광주교도소로부터 고발됐다.

전남에서도 피해가 잇따른다. 1월 1건 이후 잠잠하던 피해 신고는 3~4월 사이 도합 8건으로 늘었다.

지난달 13일 전남 영암 한 공구 업체에도 납품업체 담당자를 사칭한 사기범의 전화가 걸려왔다.

사기범은 앞서 같은 수법을 사용, ‘군부대에 공구를 납품해 달라’고 요청하며 해당 공구업체와 천분을 맺었다.

이후 ‘다른 업체와 군부대 식량 납품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속인 뒤 계약금 대납을 요구했다.

이에 속은 공구 업체 관계자는 신원불상인이 알려준 계좌로 1억6200만원을 송금한 뒤 연락이 두절되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광주경찰청은 현재 동일수법으로 확인된 건들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사기범들이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며 예방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은 “대량·단체 주문 전화를 받은 때에는 선결제 및 예약금을 요구하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며 “단체 주문 후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00% 사기이므로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김도기 기자

광주시교육청 ‘늘봄거점늘봄센터’ 개소식 개최

공휴일 제외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운영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6일 광주호동초등학교에서 ‘늘봄거점늘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늘봄거점늘봄센터는 시교육청이 주말 및 긴급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 5일부터 직영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오는 12월 28일까지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제외한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센터는 2개의 늘봄교실, 놀이기와 공놀이 등 신체 활동을 위한 다목적 구장,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생태놀이 공간 등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책놀이 ▲영어놀이 ▲미술활동 ▲음악활동 ▲놀이활동 ▲한자활동 등 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수강료와 급·간식도 무상 제공한다.

시교육청은 주중 과대과밀학교 대상 오후 및 저녁 늘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 거점센터 운영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늘봄거점늘봄센터가 단순한 돌봄 공간을 넘어 아이들이 주말에도 안전하고 즐겁게 머물 수 있는 ‘제2의 학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공적 돌봄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조선휘 기자

전남,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위해 모니터링단 강화

정책 참여 확대 등 통한 실효성있는 지원정책 논의



전남도는 27일 전남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주민 도정 모니터링단 소통 간담회’를 열어 모니터링단의 정책

참여 확대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외국인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제5기 도정 모니터링단

단원과 전남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간담회 결과 공유, 주요 지원시책 안내, 향후 모니터링단 활동 방향 논의, 정책 관련 자유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료 지원사업과 전남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통역 및 행정상담 서비스제공 현황 등을 공유했다.

모니터링단의 역할을 단순 자문에서 나아가 정책 현장 탐방 등 주도적 활동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도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제5기 외국인주민 도정 모니터링단은 네팔,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 몽골, 태국, 카자흐스탄 등 9개국 출신 30명으로 구성됐다.

/김 호 기자

작년 광주·전남 교통법규 위반 적발 220만건…“속도위반 최다”

속도위반 171만7289건…전체의 78% 달해

광주·전남에서 지난 한해 신호위반과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220만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주요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총 220만528건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전년(234만5726건)에 비해 14만5198건(6.19%) 감소한 추세를 보였으나 속도위반 사례는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제한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운행해 적발된 속도위반 사례는 171만7289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78%에 달했다. 1년 전(170만3959건)보다 1만3330건(0.78%) 더 늘어난 수치다.

이러 신호위반 30만2163건(13.73%), 안전띠 미착용 4만8031건(2.18%), 중앙선 침범 2만3397건(1.06%), 음주운전 9982건(0.45%), 안전운전 의무 위반 6640건(0.30%), 무면허 4587건(0.21%), 기타 8만8439건(4.02%) 등이었다.

특히 안전띠 미착용 적발은 전년(9만4342건)에 비해 절반(49.1%·4만

6311건) 가까이 감소했고, 중앙선 침범도 전 년(3만9277건)보다 40.43%(1만5880건)나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단속 건수를 보면 광주는 전년(79만6159건)보다 15.03%(11만9661건) 감소한 67만6498건을 기록했다.

사태별로는 속도위반 55만78건, 신호위반 7만1185건, 중앙선 침범 5052건, 안전띠 미착용 4084건, 음주운전 3856건, 안전운전 의무 위반 2308건, 무면허 2104건, 기타 3만7831건 등이다.

전남은 작년 152만4030건으로 전년(154만9567건)보다 1.65%(2만5537건) 감소했다.

/김도기 기자

전남관광재단 대표 사무실 압색

채용 비리 의혹 경찰 수사

경찰이 전남관광재단 임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나섰다.

25일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남 전남관광재단 A대표이사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남관광재단 임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로 일러졌다.

경찰은 A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채용 관련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대표이사는 경찰의 의혹에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A대표이사는 “채용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어 딱히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답했다.

광주 학생, 올해 교육급여

최대 76만원 받는다

광주 학생들이 올해 교육급여로 최대 76만원을 받는다.

광주시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교육급여와 학생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교육부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해 초등학생 48만7천원, 중학생 67만900원, 고등학생 76만800원 등을 연 1회 지급한다.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는 오는 2026년 2월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학교와 장학재단에서 별도 통보를 한 후 수급 대상자의 신용·체크카드로 해당 금액을 지원한다. 기존에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육정보화 지원비를 지급하는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도 있다.

대상은 ‘2025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심사 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수급자격자, 가구 중위소득 기준 80% 이하, 학교별 학교장 추천자다.

올해부터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학교장 추천비율을 지난해 10%에서 20%로 늘렸다.